

금남로에서

정재현



지난 1995년 34년 만에 전면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벌써 5기째 접어든 지방자치의 자리를 잡기는 커녕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전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직 단체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인사·예산·허가권, 개발사업 승인권 등을 쥐고 공직인사와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쥐락펴락 한다. 지자체 단체장을 '소통령' 지역

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민선 5기 역시 시작부터 씩이 노랗다. 인사 전횡, 전임 자업적 뒤집기, 전시성 사업 추진 등 벌써 '조자통 헌 갈 쓰듯' 권한을 남용하는 '제왕적 단체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민선 5기를 맞아 시행된 각 지자체 인사가 대표적 사례다. 능력이나 서열보다는 선거 관련 인사와 측근 등 '내 사람 챙기기' 식 인사가 만연해 있다.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같은 정실인사는 민선 1기

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단체장의 인사권과 재정 편성권, 인허가권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지금처럼 있으나마나 한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구로 독립화하고 인사 청문회 도입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인사위 심의결과를 인사권자가 존중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단체장 견제·감시 장치 시급

또한, 지자체 과산재, 주민소환제 적용 등을 통해 예산을 마치 제 호주머니 돈처럼 낭비하고 전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방 재정의 명확한 위기 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의 해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처자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80여 달러 재정적자를 뱐다가 2003년 주민소환 투표로 해임됐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다. 더 이상 일선 지자체가 단체장의 '작은 왕국'으로 전락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를 감시와 견제의 무풍지대로 남겨놓고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쟁취한 지방자치인가. 지방자치를 이대로 고사(枯死)시킬 수는 없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지방자치 이대로 枯死 시킬건가

영주'로까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단체장으로 '역이동'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도 전횡과 독선, 일탈 행위를 일삼아도 견제할 사람이 없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지방의회는 지역 분할 정치구도상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니 민선 4기 전국 단체장의 40%(광주·전남은 50% 이상)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것이다. 심지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 번도 구속을 피하지 못한 지역까지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뇌물은 기본, 구속은 필수"라

때부터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관행화되다 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 아닌 단체장 오직 한 사람만의 뜻을 받드는 사복(私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사(萬事)라는 인사부터 이렇진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단체장이 비리와 불법으로 중도 하차하고, 재정이 바닥난 지자체가 속출할 것인지 걱정이다.

반복되는 단체장의 비리와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단체장들의 부패는 사업·허가 과정과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뇌물은 기본, 구속은 필수

지방재정은 바닥을 드러내 파탄지경에 이르러,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심점인 지방공직사회는 방탕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고 주민들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갈등과 반목만 심화되고 있다. 이게 부활된 지 15년 된 우리 지방자치의 자화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자체 단



임명재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남과 북은 매우 불편한 관계에 빠져들고 말았다. 북한과 협력했던 세월 또한 '잃어버린 10년'에 포함되었음이 틀림없다. 개성 금강산 문제가 심각하게 얽히더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마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개성공단은 2000년 11월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남측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에서는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되었

에 안 되는 임금이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전정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수천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 정권이 견제할 것이고 그래서 배은망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봄에 이명박 정부가 마치 북한과 곧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은 주장을 펼쳤을 때 5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인 5조원의 주식을 팔았던 것에 비

북한은 남한 경쟁력의 교두보 이어야 한다

다. 남과 북이 상생하는 아마도 최초의 모델이 아니었을까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잇따른 북한방문을 통해 더욱 다져지고 발전되었던 개성공단은 첨예하게 대치하던 거대한 세력이 작은 화합의 불씨를 잉태하는 인류역사상 통틀어 매우 희귀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었다.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민족성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2007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3559만 8000달러에 이르고 수출액도 838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의 분양기가 남한의 사회공단의 10분의 1 수준 이었고, 중국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의 그것보다도 3분의 1 값에 불과했다. 최저 임금도 국내 수준에 비해서는 8%, 베트남의 임금에 비해서는 50% 정도밖

하면 약과인 것이다. 북한과의 대립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완전 별개의 건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 한 번 합의를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을까?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지역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남한의 이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공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클럽을 신는 코너입니다.

무더운 거리 돌기둥 수리하던 시민에 감사의 박수를

최근 우연히 광주시청 근처 도로를 지나면서 신사차림의 한 사람이 한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인도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마침 신호등이 바뀌어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 전 차량 충돌로 인해 떨어져 인도에 나뎠던 돌기둥(볼라드)을 다시 원상대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도로 보수업체의 직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다가가 그 짐작 역제를 얻을 수 있는 나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은 업체직원이라

니라고 하면서 시장에 가면 한 통에 5만원 정도를 주면 살 수 있다고 했다. 그에게 돌기둥과 상관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며 고생을 하는 나고 물었더니 그는 우연히 파손된 돌기둥을 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뿐이라고 답하면서 묵묵히 일했다. 참 대단한 시민이고 다시금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이런 훌륭한 시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며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승만·광주시 남구 백운동

기고

오주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를 표방하는 민선 5기 시대가 열렸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수출도시로 성장하기까지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다 보니 교통선진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감을 보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 잠깐 반성할 사이 광주의 교통사고발생률이 4년째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어 민주·인권·평화의 상징도시로서 그 명성에

또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미래 교통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습위주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쉬운 점은 교통문화의 지도자이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업용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해 토·일요일 교육까지 시행하며 교육 편

교통사고 '제로' 교통의식 '프로' 도시로

큰 흠집을 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불명예스러운 광주의 교통 현주소를 벗어나기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의 민·관·군·언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를 지난해에 발족하여 대대적인 교통사고 감소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광주·전남이 선두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뜻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시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며, 과단성 있는 사업과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향·예향·미향 도시 광주의 명성을 지켜나가는 길이라 본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버스, 택시, 화물 등 연간 약 2만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법규, 웃음치료, 친절서비스 교육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용 차량 운전자부터 배려되고 모범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 미수자에 대한 미온적인 제재가 수년간 지속되어 보니 교육참여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교통안전 교육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2만여 명의 교통가족을 위한 교통문화회관 건립과 현실성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낙후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등 민선 5기의 세심하고 배려있는 교통정책이 예상된다. 최근 잇따른 전세 버스의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국민적 희생을 경험하기도 했고, 특히 광주는 2015년 U대회 시가지 매년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어 선진교통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 광주가 교통사고를 '제로', 교통의식 '프로' 도시, 교통선진 명품도시로 도약할길 기대한다. (광주시 교통문화연구원장)

시설

광주 도시경쟁력 문화인프라에서 찾아야

광주시의 도시경쟁력이 세계 500위 권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07~2008년에는 295위에 올라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던 광주시가 올해는 경기도 수원시(183위), 성남시(269위)와 경북 경주시(328위), 전북 전주시(339위) 등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2009~2010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에 따르면 뉴욕이 1위, 서울 9위, 같은 광역시인 울산 171위, 부산 188위, 인천 207위, 대전 234위, 대구가 290위에 올랐으나 광주만 500대 도시에서 밀려났다. 광주는 지난 2007~2008년 조사에서도 지역 내 총생산(GDP) 176위, 특허취득 부문 294위로 국내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나타냈다. 광주시가 이처럼 국내 일반 시보다 도시경쟁력이 뒤진 것은 열악한 산업구조 탓이 크다.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적

다 보니 사람과 인재의 역의 유출이 줄을 잇고, 인구는 정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업률은 크게 떨어지고 기업 유치 역시 기반산업이 취약해 실적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세계 500대 도시 가운데 광주가 GDP 176위, 취업률 124위, 다국적 기업 유치 343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에 따라 광주시가 갈수록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만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주요 도시가 컬러노믹스(Culturenomics), 즉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인프라가 창출된다면 광주의 세계화는 결코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영터리 표지판으로 관광객 유치하겠는가

광주시에 주요 시설 표지판의 중국어 표기가 상당수 잘못 표기돼 있다고 한다. 더욱이 광주시 중국어용 홈페이지는 정보 사향의 제목과 관련 내용이 다른 경우까지 있고 각종 통계자료도 실체와 차이가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내 표지판, 특히 시청의 안내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예향(藝鄉)'이란 말이 낯 뜨거워진다. 광주시에 대부분의 도로 표지판에는 중국어가 보이지 않다고 한다. 중국어 표기가 돼 있는 관광·문화재 안내 표지판도 잘못 표기된 곳이 많았다. 도시철도 1호선 출구 표지판에 구도청의 '구'자가 옛 (舊)가 아닌 분할할 구(區)로, 중국어판 광주지도에는 지하철 '운' (운천)이 '운'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광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 내 '5·18민중항쟁 사적지 안내도' 역시 오자투성이고 문법도 엉망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광주시 중국어용 홈페이지다. 광주우치동물원 코끼리 출산 제목의 광주소식 게시판에 뜬금없는 시민프로젝트단 창단 시민주 청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등 뒤죽박죽인 채 방치되고 있다. 이런 영터리 표지판과 게시판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안내 표지판, 특히 시청의 안내 홈페이지는 외지인이나 외국인인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다. 광주시를 알리는 얼굴인 셈이다. 안내 표지판과 홈페이지를 영터리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라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중국은 광주·전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많다. 중국 관광객 유치 없는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광주시는 당장 잘못된 안내 표지판과 홈페이지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영터리인데 어느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인가.

無等鼓

아이작 뉴턴(Newton)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는 중력(Gravity·重力)은 그동안 우주를 지배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여겨져 왔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다. 정확하게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과 지구의 자전으로 생겨나는 '원심력'을 더한 힘이다. 중력이 있기에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땅에 붙어 생활할 수 있다.

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페를린데 교수는 물리학의 새로운 추세인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의 권위자다. 우주의 최소단위가 양성자·중성자·전자·쿼크 같은 동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동하는 아주 가는다란 끈(string)이라고 간주하는 초끈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판단이다.

초끈이론



그런데 그런 중력이 일종의 환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암스테르담대학 물리학과 에리크 페를린데(Verlinde) 교수는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지금까지 과학은 중력을 완전히 잘못 된 시각으로 연구해왔다. 중력은 자연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우주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는 2차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서 중력은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다 근원적인 존재 또는 법칙이 중력이라는 현상

한국이 자랑하는 천재소년 송유근(13)군이 지난해 TV 예능프로그램인 '박준홍 쇼'에 출연해 '앞으로 초끈이론에 집중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이 생각난다. 일상에 파묻혀 사는 범부들로서야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탐구하는 물리학자들의 엄청난 사고(思考)스케일에 입만 벌릴 수밖에 없겠지만, '중력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주장이 사실로 밝혀져 물리학과 인간세계는 물론 우주전체의 발전에 또 다른 도약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 濟 浩		논설주간 申 港 樂	
편집국장 曹 庚 完		편집국장 曹 庚 完	
1952년 4월 20일 創 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회 서 함 부 2200-661 여 령 체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미 케 링 국 227-96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 회 서 함 부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